

아동복지시설에 풍성한 추석선물 전달

도의회, 전주남부시장서 장보기 행사 후 자매결연한 전북좋은이웃·사랑의 보금자리 그룹홈 등 방문

전북도의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친 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도의회 황현(익산) 의장과 강영수(전주 4) 부의장, 송성환(전주3) 행정자치위원장, 이도영(전주2)·정진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은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은 12일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미리 구입한 은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을 구입했다.

이어 도의회와 자매결연한 전북좋은이웃과 사랑의 보금자리 그룹홈 등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황현 의장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급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상인들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과일과 야채, 제수용품 등을 값싸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매번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상인여러분이 베풀어주시는 격려로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채우고 돌아간다"며, "의원들의 장보기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인들이 힘 내라는 의미와 도민들과 시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 해 달라라는 뜻도 내포돼 있다. 추석 장보기는 값싸고 인심이 넉넉한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도의회 황현 의장 등 30여명은 12일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은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을 구입해 도의회와 자매결연한 전북좋은이웃과 사랑의 보금자리 그룹홈 등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최은희 의원은 "요즘 전통시장은 장보기가 편리해졌다. 또 그러면서 사람냄새가 많이나 정감이 간다"며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시민들이 찾아 상인들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조배숙 "북한 핵실험 MB-차정부 때만 4차례"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포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핵실험을 못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그 중 4차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나왔다"며 "대화를 거절하는 박 정권에서 3, 4, 5차 핵실험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고 비판,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는 남아공과 리비아 밖에 없다"며 "남아공은 적대국과의 긴장이 완화되자 핵무장을 포기했고 리비아는 영국이 주선한 미국과의 비밀협상으로 핵무장을 포기했다"고 발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국방부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다"고 정부와 여당 일각의 경경 대응론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발언 내용은) '김정은 지도부를 직접 응징하겠다',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등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투입에 대해서도 "한반도 중심으로 핵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핵 위험에 빠뜨리는 '김정은식 위험한 불장난'에 불과하다"며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여권발 핵무장론을 질타했다. /뉴시스

양향자 "차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 조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진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통령의 귀국 일성은 김정은 정진상태가 통제불능일 것이라고 바이옴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북한에 통제 불능의 사람이 있고 핵실험을 마구 한다고 외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이냐"며 "북한이 도발했으면 대통령의 첫 일성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선을 다하니 국민과 기업은 걱정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라"고 당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말이 경제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통령이) 깊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서벌관회의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은 한 마디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확대주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도) 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단 5분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 불안을 정부가 관리하려는 뜻이다. 통제불능, 책임회피, 불투명관이라는 말이 횡행할 때 국민들은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백남기 청문회, '불법시위' vs '폭력진압' 대치

새누리 "시위대의 폭력 과격 시위" ... 야당 "정부, 사과·진상규명 의지 없다"

여야가 지난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두고 12일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시위대의 불법시위로냐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백씨 사건 청문회에 선 초반부터 이같은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고 상임위가 쫓아가는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도 되느냐"고 발언, 여야가 추경 협상 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백남기 청문회를 통과시킨 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여당은 그랬나본데 야당은 지도부와 상임위

간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백씨가 쓰러진지) 30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은 의혹을 가지고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 의혹을 풀어주는 게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자료 제출이 너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윤재욱 새누리당 의원이 "자료를 잘못 제공하면 사실관계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칫 왜곡돼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찰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백씨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명백하게 국가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도 없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면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한 건 아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과해야 맞지 않느냐"고 이날 중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장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전 청장은 그러나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고, 여당은 강 전 청장을 옹호하며 시위대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주

동자인 한상균의 실체가 1심 재판 판결문에서 드러난다"며 "경력을 폭행하고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시위대의 폭력 과격 시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살인, 살인미수 이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과격 단어 (사용은) 없길 바란다"고 야당 일각이 백씨 사건을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이 청문회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공권력이 사랑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생각해보자"며 2년 간 '무언질'의 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후 "불법시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도 많다"며 "집회·시위를 신고한 책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찰들에게) 유감표명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백씨 자녀인 백도라지씨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의경 등이 나란히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